김 형 준

• 현)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한국선거학회 회장

4·7 보궐선거 평가와 정치적 함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의 득표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39.2%)에게 18.3%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62.7%)가 28.3% 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김영춘 후보(34.4%)를 누르고 승리했다. 3년 전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위를 했지만, 이번엔 오 후보가 서울 전역을 석권했다. 오 후보는 서울 425개 동 중에서 딱 5곳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도곡2동, 대치1·2동, 청담동, 서초구 서초4동, 반포2·3동 등 9개동에서는 오시장의 득표율이 80%를 넘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는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40대에서 근소하게 뒤졌을 뿐 모든 연령대에서 큰 차이로 승리했다. 특히 20대 남성은 오 후보에게 72.5%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오 후보의 득표율은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49석 중 41석을 석권하며 올렸던 득표율(53.5%)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산 시장 선거도 유사했다. 박형준 후보가 16개 구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으며, 강서구(56.0%)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60% 이상 득표율을 올렸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개의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공시 지가 인상 등을 가져왔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던 현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로남불 위선'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현 정부가 표방했던 공정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은 '조국 사태', 김상조 前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꼼수 인상을 거치면서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현 집권 세력은 입만 열면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깨끗한 척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정을 언론 탓, 야당 탓, 前 정부 탓을 하는 오만함과 뻔뻔함을 보였다. 이런 몰염치한 행태가 결국 국민의 분노 투표로 심판받았다.

둘째, 나라를 잘못 이끈 것에 대한 심판이다. 한국리서치가 보궐선거 직전에 실시한 조사(4월 2~5일) 결과,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55%)는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4%)보다 21% 포인트 더 많았다. 지난해 9월 4주 이후 이런 추세는 변화가 없었다. 20대의 경우 무려 40% 포인트(62% 대 22%) 차이였다. 30대에서도 그 차이가 25% 포인트였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내가 참여해 투표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됐다.

셋째, 전임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권력을 악용한 성 추행에 대한 심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12~14일)에 따르면, 민주당이 참패한 요인으로 가장 많은 43%가 '주택, 부동산 등 정책능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직 시장의 성추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순이었다. 시민들의 10% 정도가 전임 시장의 성 추행 문제를 투표 결정요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요약하면,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 폭정과 위선으로 민생 파탄 상황에서 국민들이 '행동하는 분노'를 보여 준 것이다.

검찰총장 사퇴 후 유력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윤석열 前 검찰총장은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NBS 조사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여론과 민심이 적적하게 반영된 선거이다."라는 비율이 62%였다. 중도층에서 무려 69%나 차지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과 관련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 재편성'(party realignment)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정당 재편성은 정치체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정치학 용어이다. 통상, 이슈, 정치 지도자, 정당의 지역적 지지, 유권자 지지 기반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다. 그런데 정당 재편성이 일어나면 장기간 유지되면서 새로운 정치권력 구조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전체 300석 중 180석(60%)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 집권 20년'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 배경에는 유권자 지형 변화가 자리 잡았다. 2012년 대선까지는 2040세대는 범진보, 5060 세대는 범보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12년 대선에서 20대(18.1%)와 30대(20.1%)의 경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각각 65.8%와 66.5%를 득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각각 33.7%와 33.1%를 얻었다. 40대(21.8%)에서 문 후보(55.6%)가 박 후보(44.1%)보다 11.5%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50대(19.2%)와 60대 이상(20.8%) 연령층에서는 박 후보는 각각 62.5%와 72.3%를 얻었다. 반면 문 후보는 37.4%와 27.5%를 얻는데 그쳤다. 2012년 대선 이후 86세대(1960년~1969년)가 50대를 장악하면서 '2050(진보) 대 6070(보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이 연승할 수 있었다. 가령, 2017년 대선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50대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36.9% 득표로 홍준표 후보(26.8%)를 압도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에 큰 지지를 보냈던 2030 세대의 반란이 있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와 3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각각 55.3%, 56.5%, 부산에선 박형준 후보가 각각 51.0%, 50.7%를 얻었다. 향후 유권자 지형은 2030세대·4050세대·6070세대로 재편되면서 더 이상 '민주당 우

위의 정당 체제'가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의 이탈이다. 1988~1998년 보수 정권(노태우·김영삼), 1998~2008년 진보 정권(김대중·노무현), 2008~2017년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이 차지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전망해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80년 지미 카터, 1992년 조지 부시, 지난해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만 본다면 한국에서도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셋째, 승리 선거 연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거 연합은 1997년 대선 때의 'DJP 연대'다. 지역 연대(호남+충청)가 핵심 축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현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와는 달리 특정 이념과 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상황과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스윙 보터'로 변신한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향후 대권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선에서 40대 X세대와 50대 86세대의 표심은 진영논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대 Z세대와 30대 밀레니엄 세대는 공정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시대정신으로 생각하는 공정·미래·젠더의 가치에 더 공감하고 이를 실현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국민의힘은 4연패의 고리를 끊고 내년 대선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야권 재편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승리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잘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 NBS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주된 이유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인 반면,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3%), '국민의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3%),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란 정당활동을 잘해서'(1%) 등 '국민의힘이 잘해서'는 겨우 7%에 불과했다. 선거 승리를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前 비상대책위원장도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압승을 두고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새로운 수권정당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자중지란에 빠지면 미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TK 출신 김부겸 前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부겸 후보자는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적폐 청산, 민생 안정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개편에서는 '친문' 진영과 각을 세워 온 이철희 前 의원을 정무수석에 기용했다. 정부 여당이 현실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선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새 인물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잘못된 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꾸고 낡은 이념과 편가르기 진영의 늪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단언컨대,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없다.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압승을 했고, 8·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3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6개월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패배했다. 이번 선거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진보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 겨우 평평해졌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선거판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늘 분노의 회초리를 든다. 패배한 여당도, 승리한 야당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나 민심이 무엇을 함축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내년 대권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만하고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하고, 참회하고 혁신하는 세력은 승리할 것이다.